

광주 시 융합 집적단지·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면제

■예타 통과·면제 사업 뭐가 있나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정부로부터 30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게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역자치단체들은 대규모 산업 기반 시설을 갖춰 미래 지역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형 프로젝트 추진하기 위해 예타 통과에 목을 매었다. 그동안 경제성의 잣대만 들이대는 예타 조사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매우 불리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서 소외된 광주·전남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속철도, 도로 등의 개설이 늦춰지면서 풍부한 자원을 갖췄지

광주 3개, 전남 5개 사업 확정

하남~장성 광역도로사업 선정

예타 진행중인 사업 3개 남아

시·도 신사업 발굴 적극 나서야

만 지역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올 들어 정부의 예타 면제 추진과 최근 이뤄진 예타 평가 기준 완화는 열악한 지역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지역 성장을 견인할 대형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광주 3개 사업 예타 면제·통과= 광주

시가 올 해 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했거나 면제받은 사업은 ▲인공지는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4061억·면제) ▲호남 고속도로확장(동광주-광산IC·4031억)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광주방면 개설(696억) 등 3개다.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전남과 함께 추진 중인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1조7055억) 뿐이다. 그나마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도 전남과 함께 추진 중인 광주 하남-장성 삼계(15.4km·1803억) 간 광역도로사업이 전부다. 예타 조사를 면제받은 인공지사업의 경우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으로 반영된 것으로, 현재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광주방면 개설 사업의 경우 지난 2009년 9월 국토교통부의 빛그린산단 지정고시에 따라 산단 조성이 추진되면서 산단 진입도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회의 2018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설계비가 일부 확보되면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이 들어서는 광주 빛그린산단의 광주방면 진입도로(광산구 삼거동-분량나들목 6.5km, 4차선)는 전액 국비로 개설된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3년 말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전남은 5개 사업 예타 면제·통과= 전

남도가 올 해 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했거나 면제받은 사업은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국도 77호선(4265억·면제) ▲여수 화태-백야 국도 77호선(5277억·면제) ▲수산물 수출단지(1000억·면제) ▲광양항 나포부두 리뉴얼 사업(1606억)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사업(2578억) 등 5개다. 이들 대형 SOC 사업들은 그동안 경제성 분석만을 따지는 예타 조사에 발목이 잡혀 수년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광양항 나포부두 리뉴얼 사업만 해도 지난 2015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가 5년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멈춰 있다가 이번에 통과됐다. 여수 남면 화태-화정면 백야를 잇는 국도 77호선도 2003

년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에 반영됐을 뿐 제 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들 사업이 올 들어 예타를 면제받거나 통과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1조7055억)과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1156억) 등 고작 2개 뿐이다. 여전히 열악한 지역 산업기반을 고려하면 광주시, 전남도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역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이해찬 대표에 지역현안 지원 당부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들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우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이 대표와 민주당에 감사 인사를 전한 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수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수영대회 레거시사업(유산사업)으로 광주에 한국수영진흥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안정적인 운

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광주형일자리 노동자 복지 확충 등을 위해선 조속한 해당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진정한 첨단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인공지는(AI) 중심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국가계획 변경을 비롯한 '정전 전남,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다.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도가 지난 7월 12일 '전남 새전년 비전 선포식'에서 제시한 프로젝트다. 섬, 바다, 하늘, 바람 등 풍부한 정적자원과 유서 깊은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전남의 미래 비전이다. 김 지사는 이날 민주당 간담회에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 국가계획 변경 ▲완도-고흥 구간 등 국도 승격 및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국가계획 변경 ▲전라선 KTX 증편 및 주요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등 '블루 이코노미' 관련 핵심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화 노력 무대응 일관한 일본이 원인 제공”

■정부 지소미아 종료 배경

與 “결정 존중” 한국 “즉시 철회”

청와대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

日정부 “극히 유감” 불쾌감 표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는 일본의 변함없는 태도에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 모색이었던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일본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NSC 상임위는 이날 국무총리도 참석해 1시간 가량 토론을 한 후 중요료를 전격 결정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했고, 자유한국당은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 “지소미아 종료-우리 정부 노력에도 무대응한 일본이 원인 제공”-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본의 강제배상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일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일본은 지난 6월 오사카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율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란?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합정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

- 총 21개 조항**
 - 제1조 목적: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보장
 - 제2조 대상: 한국의 군사 비밀 정보는 일본의 국비·특정정보에, 일본의 군사 비밀 정보는 일본의 비(秘)에 상응하도록 규정 (이급 이하의 군사비밀만 교환)
 - 제3조 정보보호의 원칙으로 '사전 사전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떤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제9조 군사비밀 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해 당사자 간에 전달
 - 제10조 관련 정보 보관된 시설의 보안에 대해 책임자가 함.
 - 제11조 비밀문서는 이종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야 하며, 비밀정보는 쉽게 있는 차량으로 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할 경우, 적절한 암호체계 이용.
 - 제17조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협정의 종료로 원하면 상대방에 관용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 통보일시 지체없이 1년씩 연장.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 양국 군사정보 효율성과 함께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력 등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는 "(이 문제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한일군 문제로 인해 한미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엇갈린 여-야 반응, 대일 전면전 기류 속 일부에서는 우려도 제기=민주당 이해찬 대변인은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대체 없는 감성 물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러한 회교하고 성찰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고 일본을 놀렸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며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관계까지 악화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사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